

심야의 불청객, 오토바이 소음을 잡아라

의정단상

나광국
전남도의원



최근 여름철 열대야로 창문을 열고 잠을 청하려 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다시 닫아버린 적이 있다. 소음은 주말 밤이나 새벽이면 창문을 닫아도 들릴 정도로 심해지는데, 이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찾아와 필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3033건으로 2019년 428건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41건에서 108건으로 약 2.6배 이상 늘었다.

민원 증가에 따른 지자체 단속이 실시됐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도내 22개 시·군 오토바이 소음 단속 건수는 587건이었지만 이에 따른 조치는 행정지도 194회, 과태료 부과 5회에 불과했다.

문제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자치단체별로 단속 횟수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법에서 정한 소음 단속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소음 단속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선 최근 3년간 이뤄진 587건의 단속에서 476건이 여수와 순천에서 실시됐고, 12개 지자체는 단속을 5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가 이해하더라도 목포시, 광양시가 5번도 안되는 단속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행인 점은 정부가 지난 6월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해 기초지자체가 소음 단속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반기마다 점검 실적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기초지자체에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05데시벨(dB)로 규정된 소음 단속 기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이 100데시벨(dB) 정도임을 감안하면 현재 단속 기준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의 재개정을 통해 소음단속 기

준을 강화하고, 특히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차등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전기 오토바이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전기 오토바이는 내연기관 오토바이에 비해 소음과 배기가스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남에서는 2016년부터 보급 차종에 따라 시·군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공유배터리 충전소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

또한 소음 문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소음 감소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도민과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오토바이 소음 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5데시벨(dB)은 상당히 큰 소음으로 주변이 고요한 야간엔 더 크게 느껴져 주민이 느끼는 소음 피해는 훨씬 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도민들이 소음 공해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社說

지방소멸, 암담한 대한민국 자화상이다

정부가 기형적 불균형 끊어야

전남일보가 창사 36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다룬 지방소멸의 현실은 암담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매년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경쟁적으로 내뱉던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말로는 국토균형발전 운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고, 되레 이를 부추기는 듯 한 정부의 무관심이 만든 예견된 비극이다.

당장 전남은 지난 1990년대 250만 명이 웃돌았던 인구가 지난 2014년 190만 명으로 감소했고 2023년 3월에는 180만 명 선까지 붕괴됐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시와 광양시를 제외한 20개 시·군이 올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을 정도다. 20~30대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멸 고위험 지역 또한 고흡과 보성 등 11곳에 이른다.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도 0.3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0.6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저출산과 고령화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지방소멸이 국가의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2023년 기준 5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도 지난 2015년 34만 원에서 2021년 53만 원으로 벌어졌다. 고용률 격차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은 인구감소로 소멸을 걱정하는데,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은 기형적 불균형이면서 국가적 손실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 대책으로 지방소멸을 늦춰야 한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젊은 세대는 인프라가 없어 수도권을 선호하고, 정작 인프라를 만들 기업과 자치단체는 젊은이가 없어 인프라를 만들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농업 혁신' 보여준 군서농협 논콩 재배

쌀값 하락 속 대체작목 성공

쌀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체작목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영암 군서농협이 6년째 쌀 대체작목으로 논콩 재배단지를 확대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 군서농협은 지난 2019년부터 6년째 조합원 100여 명이 참여해 54ha에 달하는 논콩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올해는 65ha를 재배하고 있다.

재배 초기 어려움도 있었다고 한다. 기술 부족으로 990㎡ 생산량이 210kg에 그쳤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직면했다. 군서농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모화, 집단화된 논콩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직접 트랙터와 콤팩트 등 농기계 7대와 전문 인력 3명을 확보했다. 그 결과 990㎡당 생산량은 재배 초기보다 무려 180kg 증가한 390kg에 달했다. 판로도 안정적이다. 지난해 생산된 179톤 전량을 농협이 직접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에 판매했다. 판매액 9억

원은 조합원에게 공동 정산해 지급했다. 논콩 2ha 기준 소득이 벼 재배소득보다 1300만 원이나 높은 2500만 원을 달성했다고 한다.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 5990원으로 지난달 25일보다 1.3% 하락했다. 올 들어 최대 폭 하락이다. 정부가 약속했던 쌀값 20만 원 보장도 쉽지 않다. 지난해 수확기 이후 8개월째 18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은 1차적으로 쌀 농가지만 전국 쌀 생산량의 54%를 수매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지난 달 기준 전국 농협 창고에 쌓인 쌀 재고량은 55만 1000톤으로 이중 12만 6000톤(22.8%)을 전남이 보관중이다.

쌀 과잉생산에 소비 감소로 쌀산업을 위태롭다. 언제까지 정부에 쌀값 보장과 시장격리만 요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적정 생산과 대체작목 육성이 유일하다. 관행농업을 탈피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대체작목 육성에 성공한 영암 군서농협의 전략이 바로 '농업 혁신'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대피하고 있다.

중부일보 제공

서석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 대한 '댓글팀' 운용 의혹이 제기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후보 여론조작팀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계정 24개와 댓글 6만개를 확인했다는 폭로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이라면 드러킹 사건과 맞먹는 대형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공세를 퍼고 있다. '댓글팀 의혹'에 한 후보는 일절 관여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당내 경쟁자(당대표 후보)들과 야권까지 합세해 몇몇하면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댓글팀' 용어가 다시 거론된 건 지난 2014년 불거진 드러킹 여론조작 사건 이후 10년만이다. 과거 대형 여론조작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서강바른포럼(후일 친박포럼)이 주도했다는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 사건(2006년)', 김용철 변호사는 장총기(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가 지휘하는 150명의 댓글 정적원이 있다고 제기한 '삼성그룹 댓글 조작(2008년)', 국가기관이 댓글부대를 동원했다는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2009~2012년)'과 '드러킹 여론조작 사건(2014~2019년)' 등이 대표적이다.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여론조작으로 구속됐다.



기자출신인 장강명 작가는 지난 2015년 소설 '댓글부대'를 펴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을 통한 선거개입에서 모티프를 얻어 쓴 소설이다. 지난 4월에는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도 개봉됐다.

영화 '댓글부대'의 영문 제목은 '트롤 팩토리(Troll Factory)'다. 트롤(Troll)은 '인터넷 문화에서 고의적으로 논쟁이 되거나, 선동적이거나, 엉뚱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또는 공격적이거나 불쾌한 내용을 공유 인터넷에 올려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하고 모임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한다. 영문 제목은 이런 트롤들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뜻인 셈이다.

과거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는 곧 여론이었다. 댓글 조작 논란으로 포털 검색순위가 사라졌지만 순위에 오르기 위해 '댓글 조작'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엄청난 뉴스가 생산·재생산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댓글 조작 등이 사회적 문제다. 'AI 페이크뉴스'까지 등장하는 요즘, 팬덤과 매크로로 댓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최적화됐다. 세상이 갈수록 혼란스럽다. 확증편향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댓글부대'가 재등장한다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